



1장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

해결되지 않는 현안과 정확하지 않은 이론

냉전이 종식된 이후 한국 외교정책의 블랙홀로 작용한 북핵문제가 발발한 지 20년이 되어간다. 굴곡과 고비들이 많았지만 문제 발발 시점보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북한의 전략을 비판하기도 하고, 한국의 대응을 문제 삼기도 하고, 주변국들의 대북전략이 표적이 되기도 한다. 흔히 모든 문제에서 책임 있는 측의 존재를 가정한다. 책임은 한 측에 온전히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측에 골고루 배분될 수도 있다. 국제정치에서는 행위자가 아닌 구조에 책임을 넘길 수도 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국제정치의 조직원리 때문에 모두가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해결이 난망한 문제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과연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가, 문제를 분석할 정확한 틀이 있는가, 그리하여 분석으로부터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북핵 문제의 중요한 배경이 동아시아의 국제정치라면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이론이 절실한 상황이다.

북핵문제는 많은 관계당사자들과 다면의 전선을 가진 복합적인 문제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북한 내부 정치의 수단이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우위를 보장하는 외교적 수단이기도 하다. 남북 간 군사균형을 변화시키는 군사무기임도 확실하다. 그리고 북중관계에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하는 외교적 수단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냉전 종식 이후 악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며 국가적 생존을 도모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다른 국가들과 거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주기도 하고, 테러집단에 대한 무기이전의 위험성을 빌미로 대미협상력

을 제고하기도 한다.

북한의 핵은 분단국가의 핵이자, 소위 '탈법국가'의 핵이고,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한 완충국가의 핵이며,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서 살아남은 공산주의 국가의 핵이다. 핵에 붙어 있는 의미가 다양한 것이어서 하나의 단순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설명이 어려우면 대책과 해결도 함께 어려워진다.

북핵문제는 하나의 사례이지만 서구 국제정치학이론으로 분석되지 않는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서구의 국제정치학이론은 서구의 경험에서 추상되어 설명의 틀을 갖춘 것이다. 근대 주권국가들 간 관계의 조직원리로부터 가설과 명제가 도출되었다. 동아시아의 경험이 서구의 이론에 반영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동아시아를 연구했거나 동아시아를 방문한 적이 없는 이론가들의 이론을 동아시아에 적용하는 것이다. 서구의 이론이 동아시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는 서구의 현실이 동아시아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이래 제국주의를 매개로 유럽에 기원을 둔 근대주권국가 국제정치가 강제되어 이식되었다. 1945년 이래 주권국가들로 재탄생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국제정치가 유럽을 고스란히 닮아있다면 서구 국제정치학이론의 적용에 토를 달 필요가 없다. 혹은 두 대륙의 경험에 약간의 편차가 있을 뿐 이론적 설명에 큰 무리가 없다면 무시할만한 문제제기이다. 그러나 백 수십년간 동아시아의 유럽화가 일정 부분에 한정된 일이라면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현실에 서구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에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시대와 공간의 복합이라는 특징을 안고 있다.¹⁾ 동

1) 한국 국제정치론의 역사에서 복합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논한 저술로는 하영선(2011) 참조.

아시아의 국가들은 일정 부분 근대 편입 이전 전통 지역질서의 논리에 따라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한반도의 국제정치 역시 예외는 아니다.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려는 남북의 노력은 1945년 이전 과거의 한반도를 미래에 투영한 결과이다. 1991년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하여 두 개의 주권국가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지만 한반도인의 마음속 주권은 불가분의 것이다. 근대 이행기의 동아시아가 겪은 제국과 식민지의 경험은 여전히 부활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로 살아있다. 근대 이전과 근대 이행과 근대가 공존하는 현상은 동아시아에 독특한 특징이다. 현재의 국제정치를 분석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가져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다. 현재를 분석하는데 현재의 논리만을 적용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서구의 경험에 기반한 국제정치이론으로 현실을 재단하는 것은 공간착오적인 것이다.

북핵 사례로 돌아가면 북핵문제는 단순한 무기개발의 문제가 아니며 복잡한 정치적 배경을 담고 있는 북한 문제의 파생물이다. 북핵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단국가로서의 북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필요로서의 핵 개발이라는 요소들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의 행동 속에는 근대로의 이행이 불완전하게 남아 전통적 관념으로 유지되어 온 정상상태와 근대적 현실 간의 갈등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피해보상 주장을 대일전략의 자원으로 삼는 북한이 북일 수교와 일본 비판을 넘나드는 것도 근대 이행기의 역사가 투영된 현실이다. 6자회담 속에서 6자 간의 세력균형이 북핵문제의 향배를 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근대 국제정치의 논리이다.

짧은 시간 내에, 그것도 서구의 논리를 강요 받아 국제정치의 근대화를 압축적으로 겪은 동아시아의 경우 과거의 그림자는 길고 깊다. 유럽도 과

거의 그림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근대로 진입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는 시대복합적 모습을 더 강하게 띤다. 북핵문제의 국제정치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예외가 아닐진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일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국제정치학이론을 수용하면서 넘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정치학이 궁극적으로 60억 이상 인간들 간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학문이라면 국가 단위의 국제정치학은 비교적 쉬운 접근법이다. 지구상의 정치네트워크가 200개 가량의 주권체로 나뉘고 소위 무정부상태의 조직원리 하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20세기 국제정치학이론의 가정이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상황은 훨씬 복잡해졌다. 냉전이 종식되고, 지구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더욱 복잡한 교류 속에 놓이게 되었다. 세계적 차원의 민주화로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중요해지면서 국제정치는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라기보다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전면적 네트워크로 변화해가고 있다. 탈(脫)베스트팔렌(Westphalen) 국제정치학 혹은 탈근대 지구정치학이 출현하게 되는 배경이다. 21세기의 국제정치학은 인간과 시민사회, 자본과 미디어, 국제기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사회학, 경제학, 국제법 등 주변 학문 분과와의 벽도 낮아지게 되었다.

이제 서구 역시 전형적 근대국제정치에서 벗어나고, 국제정치이론도 하나의 조직원리로 설명되기 어렵게 되었다. 근대와 탈근대가 섞이면서 두 시대를 동시에 살아야 하는 현실이 출현하게 되었다. 동아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역시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얽히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근대 이전, 근대 이행, 근대의 상호 복합에 탈근대/탈베스트팔렌의 차원이 없혀진 것이다.

책의 목적

이 책은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이론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로 복합조직원리론을 논한다. 20세기의 많은 국제정치이론들, 특히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무정부상태적 조직원리/구성원리를 이론화의 근간으로 삼는다. 국내정치의 짜임새가 위계적이라 한다면 국제정치는 무정부상태적이라는 것이다. 이 양분법적 대비는 안과 밖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무정부상태라는 개념이 부정적 정의이고 보면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한계가 있다. 국제정치가 물론 주권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혹은 주권국가를 부리는 상위의 정부가 없는 상태인 것은 명확하나 무정부상태가 곧 무질서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정부 없는 질서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무정부상태의 조직원리 개념은 국제정치의 역사성을 배제한 채, 20세기 국제정치, 그것도 냉전기 국제정치의 단면을 잘라 공시적으로 관찰한 결과로 나온 성격이 짙다. 유럽의 경우도 중세의 종속질서(heteronomy)에서 근대의 무정부상태로 진화하는 과정이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중세의 그림자가 길었고 중세와 근대의 중첩기간도 오래 지속되었다. 수 세기 동안 유럽인은 중세와 근대의 국제정치를 동시에 살았다. 근대에 이르는 길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강한 주권국가로 직행한 경우와 오랜 기간 중세적 연합의 성격을 유지한 제국의 경우가 한 대륙에 공존했다. ‘국제정치의 근대화’를 논한다면 하나의 근대성이 아닌 ‘다양한 근대성’이 존재했던 셈이다.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근대화는 완결되지 않았기에 현재진행형이고 근대로의 길은 더욱 다양하다. 압축된 근대화의 역사 때문에 시간적 중첩성

이 강하고, 외부에서 강요된 근대 질서 때문에 공간적 전파성이 작동한다. 무정부상태라는 부정적 정의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짜임새를 개념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제정치 이론화의 출발점으로 조직원리의 복합적 성격을 우선 논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국제체제 혹은 지역의 조직원리/구성원리와 구성단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누가 정당한 행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인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들을 엮어내는 짜임과 구성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동아시아의 경험에 근거하여 반성해 보는 것이다. 서구이론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본질이 적절히 파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고 동아시아 국제정치 이론화의 방법을 재고해보고자 한다.

관련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단위들 간의 빈번한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동아시아 국제체제 혹은 지역질서의 범위는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가? 지리적 범위로 결정되는가 혹은 왕조, 종교와 같은 다른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가? 각 단위들 간의 권위체계를 결정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권위체계가 위계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수평적으로 구성되었는가? 혹은 더 복잡하게 여러 형태가 혼합되어 있는가? 체제를 이루는 단위들은 무엇이 대표적인가? 한 성격의 단위가 일률적으로 확산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양한 성격의 단위들이 혼재하면서 국제체제를 이루고 있는가? 각 단위들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규범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적나라한 무력과 같은 힘이 체제의 변화를 관장하는가? 동아시아라는 국제체제 혹은 지역 질서 속에 하나의 조직원리가 자리잡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개의 조직원리가 공존하면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가? 혹은 상호충돌하고 있는가?

20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치학은 냉전 대립 상황에서 미소 두 초강대국이 펼치는 숨가쁜 대결을 쫓아가느라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미소가

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한 상황이고 보면 미소의 국제정치학이 곧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이었다. 소련이 멸망하고 냉전의 논리가 수그러든 21세기 동아시아에는 지난 2천년 간 삶의 기억이, 근대화 이행기를 고통스럽게 겪었던 식민지의 기억이, 미국과 소련만이 주인공이 아닌 동아시아 국가 모두의 세력균형의 현실이, 그리고 21세기 숨가쁘게 다가오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라는 미래의 그림자가 함께 밀려오고 있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등 서구의 주류 국제정치학이론은 근대 국제정치 역동성을 정연하게 이론화하는 데에 탁월하다. 그러나 거시의 흐름이 중첩되는 제3세계 역사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전근대의 기억이 너무 멀다. 21세기에 다가오는 탈근대가 근대와 어떤 교호작용을 일으키는지 비교적 단순한 복잡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제정치학은 지구전체를 다루기도 하고 한 지역의 국제체제를 다루기도 한다. 한 지역에서 추출된 이론으로 지구전체를 다루기도 하고, 지구전체에서 추출된 이론으로 한 지역을 다루기도 한다. 서구의 국제정치학 역시 서구 경험에 기반한 이론을 지구전체에 적용하기도 하고, 지구 전체에 기반한 이론으로 서구를 재조명하기도 한다. 신현실주의가 전자의 대표적 사례라면, 월러슈타인(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이 후자의 대표적 예이다. 비서구의 국제정치학자들 역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개념과 가설이 없는 상태에서 서구이론을 도입, 적용하기도 한다. 각 지역들 간의 국제정치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각 지역들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지구 전체를 이론화할 상황이 되었는지, 지역 간 편차를 무시하거나, 지구 전체를 보지 않고 한 지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떠한 담론정치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국제정치학의 유통구조와 서구 이론의 힘

서구 국제정치이론, 특히 미국의 국제정치학이론을 동아시아에 적용할 때 현실이 온전히 포착되지 못하고 정확한 실천의 길이 제시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론이 동아시아와 지구적 이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냉전 종식 이후 서구 국제정치학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반성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Crawford and Jarvis 2001; Holsti 1985; 1993; Smith 1995). 첫째, 패권국 미국이라는 현실이 국제정치학에 반영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세계경영의 중요한 문제들을 학문적 연구과제로 설정한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학자들은 이를 발전시키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본질을 캐고 원인과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만든다. 일단 연구과제로 설정되면 객관적 연구과정을 추구하게 되지만 연구과제의 설정단계는 규범과 관심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미국은 패권적 세계운명을 위한 문제해결이론으로서의 국제정치이론을 추구한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영국 패권 시대에 영국 역시 세계경영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정치학을 추구했다. 다만 20세기의 국제정치학과 같은 명확한 형태를 띠지 않고, 국제법이나 외교사의 학문분과가 발전했을 뿐이다(Hoffman 1977).

둘째, 국가와 지역을 넘어 사용되는 언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국제정치학의 현실이 각 국가와 지역별 언어로 이론화되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의 이론이 수입되어 적용, 변형되기도 하는데 그 매개가 되는 언어는 영어에 한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국제정치학의 지구적 지식시장에서 영어로 쓰여진

책과 논문이 주류를 이루면서 영미권을 제외한 다른 언어권의 학자들이 생산하는 국제정치학 지식의 유통이 한정되어 있다. 미국 이외의 영어 사용권, 즉,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언어권 학자들의 견해는 지구적으로 유통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설사 영어로 지식을 생산하더라도 정확한 의미 전달에 한계를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식의 생산 및 유통구조를 둘러싼 문제로써 이론적 지식의 수준을 결정하는 권위와 배포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다. 미국의 저널들과 출판사가 가지는 편집권한이 그 핵심이다. 지구 지식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출판물 선정에서 미국의 학문적 관심사를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학문적으로 유용한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도 출판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출판되어 유통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수 국가들이 미국 저널과 출판사에 게재된 글로 평가를 실시할 경우 미국의 편집위원은 암암리 국제정치 지식의 지구적 심사위원의 지위를 점하게 된다.

넷째,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양적 우위를 들 수 있다. 미국은 각 대학에서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을 키워내고 있으며, 이들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학문활동을 뒷받침하는 재정 지원 또한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정치학을 이끌 수 있는 인적 재정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학의 유학생 네트워크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서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지식의 피라미드형 확산구조 속에서 비서구 간의 지식교류,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전일적 시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심과 주변으로 짜여진 국제정치의 현실이 국제정치학의 구조에

반영된다. 국제정치학의 국제정치가 존재하는 것인데, 프리드리히(Jörg Friedrichs)에 따르면 국제정치학은 중심과 주변으로 구성된다. 중심과 주변은 각각 내부적으로 주류와 비주류로 또 다시 구성된다. 중심의 주류는 주변의 주류에게 지식을 보급하고, 주변의 주류는 중심의 지식을 전파한다. 반면, 중심의 비주류가 생산하는 지식은 전파되지 못하거나 주변의 비주류에게 부분적으로만 지식을 전파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의 주류와 비주류 간 대화가 단절되고, 주변에 속해 있는 국가들 간에도 학문적 대화가 단절되는 현상이다. 주변 국가의 주류들끼리는 중심의 언어와 학문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변의 비주류가 끼어들 자리는 더욱 협소하다. 주변 국가들이 자체적인 국제정치학 지식을 생산하는 것도 요원한 일이다. 중심의 학문들이 강한 학문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지식 생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Friedrichs 2004, 6).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도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국제정치학 지식을 수입하여 주류적 지식으로 삼는다. 비판이론이나 세계체제이론 등 중심의 비주류이론은 부분적으로만 수입되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비주류를 형성하기도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학문적 대화 역시 이들 주류학자들 간에 주로 발생한다. 문제는 동아시아 국가들 내부에서 주류와 비주류 간의 대화가 중심 국가 학문의 영향력 때문에 단절된다는 것, 동아시아 국가들의 비주류 간 대화의 통로가 매우 협소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이론화하여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 타국 학계와 대화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미의 국제정치학은 많은 의미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정치학의 지식사회학적 문제를 해결할 때 보다 나은 국제정치학 이론이 만들어질 것은 확실하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에 비친 동아시아의 현실

서구 국제정치학 속에 투영된 동아시아의 형상, 수입된 서구이론에 맞춰 동아시아의 현실을 재단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학자의 초상은 국제정치이론의 오리엔탈리즘과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이다. 그 속에서 구체적 시공에 근거한 삶의 모습은 추상되기보다는 배제된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주변화된다. 우선 가치와 규범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국제정치이론이 과연 이론가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메타이론적 질문, 그럴 수 없다면 서구 이론이 가지는 가치적 편향에 대한 질문이 주변화된다.

실증주의에 기초한 20세기 서구 주류이론은 분석이론의 가치중립성을 전제한다. 국제정치분석이론과 국제정치규범이론의 선이 명확히 그어지고, 규범이론은 도덕이론의 영역으로 분리된다. 규범적 편향에서 자유로운 서구 분석이론은 시공을 넘어선 보편적 적용가능성의 외피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인간과 사회에 관한 지식이 가치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문적 관심과 주제를 선택할 때 학자의 학문 외적 가치가 반영되는 것은 자연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과학과 국제정치학에서 학문적 주제가 선정되고, 이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식에서 개념과 가설 등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가치와 규범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중요한 주제이다. 패러다임론으로 국제정치학 이론을 보는 관점이나, 비판이론과 탈근대이론 등의 다양한 이론들은 국제정치이론이 설명하는 과정의 가치편향성을 문제삼는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은 실증주의 이론관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다. 주류이론이 얼마나 미국적 이론인지를 점검하는 규범이론적 과제를 탐구해야 하지만, 실증주의 학문관은 이러한 점검에서 거리를 두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자 해왔다.

둘째,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론가는 그만의 학문적 계보를 가지게 마련이다. 수입된 국제정치학에서 자신의 국제정치학 계보를 가진다는 것은 어렵다. 서구 국제정치학의 수입은 국제정치 현실과 사교체계의 독자적 계보학을 주변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흔히 국제정치학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성립되어 대논쟁들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설명되고 교육된다. 이상주의 대 현실주의의 논쟁, 과학주의 대 역사적 철학적 접근의 논쟁, 현실주의 대 자유주의의 논쟁, 실증주의 대 탈실증주의의 논쟁, 합리주의 대 성찰주의의 논쟁 등 일련의 논쟁으로 국제정치학의 발전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쟁은 영미권의 국제정치학에 한정된 논쟁으로 다른 지역에서 국제정치학의 주요 문제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영미권의 국제정치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이들 계보학적 설명은 다른 지역의 국제정치학적 관심과 발전사를 온전히 포괄하지 못한다.

국제정치학은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영미권 이외의 지역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지식으로 생산되고 축적되어 왔다. 프리드리히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외교사와 국제법의 형태로 국제정치에 대한 지식이 생산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Friedrichs 2004, 18-21).²⁾ 영미권은 대륙의 철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을 국제정치학의 원조격으로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20세기 국제정치학 이론의 선구자로서의 소개이며, 이들을 국제정치학의 본격적 계보에 포함시켜 이들의 문제의식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도 유럽근대의 전파 과정, 그리고 그 이전 전통지역질서에

2) 프리드리히는 유럽의 국제정치학이 독자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유럽 모델로 자주적 프랑스 모델, 주변화된 이태리 모델, 상호협력 하에 발전한 북구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프리드리히는 1990년대 초 유럽정치연구컨소시엄(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하에 결성된 국제관계상설연구진(Standing Group on International Relations: SGIR)이 유럽 각지에서 많은 연구성과를 취합하는 역할을 하며, 연구저널인 유럽국제관계저널(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가 유럽국제정치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Friedrichs (2004, 20) Jørgensen (2000)도 참조.

서 국가 간, 혹은 왕조 간 관계를 고민한 학자들의 계보학을 오늘날 국제정치학에 포함시키지 못한다(전제성 2007a; Chun 2009; 박건영 · 전제성 2002 등). 현실은 연속되지만 현실을 표상하는 언어와 시각은 단절된 것이다.

현 상황의 책임을 서구 국제정치이론가들의 의도적 왜곡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의 부재, 저발전, 주변화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동아시아 국제정치학자의 몫이다. 서구의 주류이론은 동아시아 등 타 지역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무관하게 자체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강력한 실증주의 혹은 자연과학주의 이론관이 발전했고, 냉전이라는 현상 속에서 다양한 비서구 지역의 국제정치 특성이 드러나기 어려웠다. 실증주의와 냉전의 조합은 20세기 주류이론이 발전한 가장 중요한 토대였다. 서구 강대국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이론으로 훌륭하게 기능하는 이론적 틀 속에서 비서구의 경험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주변화된 것은 당연할 수 있다. 3세계는 강대국 외교정책의 대상이었지만 이론의 뼈대를 바꾸는 독립변수가 아니었다. 3세계가 국제정치이론의 틀 속에 변수로 자리잡을 경우 식민지국가로 성장해온 강대국들이 도덕적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이용희 1974).

평평한 권력장을 상정한 서구 국제정치이론은 근대국가 간 국제정치를 정교하게 이론화한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서구 이론의 정확한 유용성과 이론들 간 관계 구도 속 위치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이다. 서구 이론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전체 이론 구도 속에서 선형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서구 이론의 기능을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많은 서구 국제정치이론이 20세기의 경험, 특히 냉전기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냉전 종식 이후 빠르게 전개되는 많은 현상들을 이론화하

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다. 냉전 기간 중 미소라는 두 초강대국 중심의 양극체제에 눌러 현재화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불거져 나옴에 따라 현재의 국제정치는 기존의 이론으로 분석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안게 되었다.

이론에 대한 메타이론적 논쟁도 증가하고 있다. 실증주의-냉전의 조합에 근거한 시각에서는 문화, 규범, 이념 등 실증주의적으로 분석되기 어려운 요인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생겨났다. 20세기 후반부터 발전되어 온 구성주의와 비판이론은 이러한 맥락에 놓여있다. 특히 탈실증주의 논쟁이 가속화되면서 해석학적, 탈근대론적, 역사학적 전환이 추구되고 이론의 정의, 유용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일어났다(Lapid 1989). 각 지역은 근대 편입 이전 자신이 보존해온 세계관과 가치관을 들고 나온다. 동아시아의 경우 이 지역의 국제정치적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동아시아 자체의 규범과 역사에 대한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의 부상, 혹은 아시아의 부상이라는 현상과 연결되며 동아시아에 고유한 많은 특성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대체할 중국적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정교화하고 이에 근거한 국제정치이론의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전재성 2009b).

비판이론의 필요성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을 생각하면서 주류이론에 대한 서구 내 비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20세기 중반 이래 주류 국제정치학 이론의 위치를 차지한 것이 미국의 실증주의 계열의 신현실주의, 신자유이론이라 한다면 소위

고전이론가들은 이를 비판한 선례를 보여준다. 모겐소(Hans J. Morgenthau)의 자연과학주의 비판이나, 불(Hedley Bull)을 위시한 영국 국제사회학파의 실증주의 비판을 우선 들 수 있다.

1980년대부터는 소위 비판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이론들이 발전해왔는데, 대략 네 갈래의 사상적 근원을 추적해 볼 있다. 첫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영향을 받은 비판이론가들로서 콕스(Robert W. Cox)가 대표적이다. 콕스는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의 전통주의 대 비판주의의 이분법을 국제정치이론에 적용하여 문제해결이론 대 비판이론의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 링클레이터(Andrew Linklater)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정치학이론의 해방적 규범기반을 강조하는 한편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사회소통이론도 수용했다(Rengger and Thirkell-White 2007).

둘째,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영향을 받은 소위 신그람시학파들로 주로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 주류이론을 비판하는 갈래이다. 이들의 학자는 이론을 비롯한 상부구조가 지배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그람시의 기본 시각을 받아들여 국제관계이론의 계급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조망한다(Gill 1990; 1993; Murphy 2005 등).

셋째, 페미니즘의 비판이론으로 기존 국제정치학이론의 남성성 중심을 비판하면서 성주류화 담론을 이끌고 있다(전재성 2006b; Sylvester 1994; Tickner 2001 등).

넷째, 탈구조주의 혹은 탈근대이론의 다양하고 방대한 계열의 학자들이 다. 푸코(Michel Foucault), 데리다(Jacques Derrida) 등 탈근대이론의 영향을 받아 주류담론의 합리주의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권력내재적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 애슐리(Richard K. Ashley), 워커(R.B.J. Walker), 캠벨(Kurt M. Campbell), 더데리안(James Der Derian) 등의 이론을 들 수 있다(Der Derian 1987; 1992; 1998;

Walker 1992; Ashley 1986 등).

비판이론이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크게 갈린다. 한편으로 비판이론은 기존 이론을 비판하는데 그치고 현실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적 공헌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견해이다. 슈웰러(Randall L. Schweller)는 링클레이터의 이론을 “허상에 불과한 이론”(fantasy)이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비판이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반면, 비판이론이 기존의 주류이론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코헤인(Robert Keohane)이 성찰이론이라고 부르는 이론의 계열이나(Onuf 1989; Kratochwil 1989), 구성주의가 적극 수용하는 존재론적 기반 역시 비판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구성주의는 자유주의 편향을 벗어나 비판적 관점에서 유럽 대륙의 탈근대론과의 접합을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하고 있다(전재성 2010b).

국제정치규범이론의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해온 일군의 학자들과 세계화 이래 지구화, 지구거버넌스, 세계시민주의적 민주주의 등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국제정치의 변화를 살피온 소위 신규범이론가들 역시 비판이론 맥락에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부류라 할 수 있다.

비판이론 진영 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비판이론이 기존 이론을 인식론, 존재론, 규범론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비판하지만 현실을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는 분석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신그람시주의처럼 계급적 관점에서 국제정치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경제적 충위를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구성주의가 분석적 이론인가 아니면 기존이론을 비판하는 메타이론, 혹은 접근법에 불과한가 하는 문제제

3) 통상적 구성주의와 비판적 구성주의의 구분에 관해서는 Hopf(1998) 참조.

기 역시 비판이론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³⁾ 비판이론이 새로운 분석, 설명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개념과 가설, 분석틀이 필요한 상황이다.

책의 주장과 구성

이 책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요소가 되는 조직원리의 변화과정, 여러 조직원리들 간 복합과정, 그 속에서 개별 현상들이 일어나는 맥락 등을 살펴본다. 현실의 현상을 직접 이론화하는 경험이론의 수립 과정은 아니다. 그보다는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 혹은 바탕이 되는 조직원리들을 논하고 이론의 구성요소들을 살핀다는 점에서 메타이론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가지는 시대적 중첩성과 공간적 전파성 때문에 분석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전통 질서에서 21세기까지, 유럽과 동아시아의 공간적 비교까지 이론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논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전형적인 서구 근대를 상정한 서구의 주류국제정치학이론을 염두에 두게 된다. 이들을 비판한 서구의 비판이론, 특히 비판적 관점에서 근대 형성기부터의 국제정치를 다룬 역사사회학적 접근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Rosenberg 2006).

책의 주요 주장과 구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중후반에 자리잡은 서구의 주류 국제정치이론, 즉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냉전과 실증주의 이론관이라는 독특한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 정보화, 민주

화 등 새로운 거대조류들이 강화되면서 냉전 논리로 억압되어 있던 다양한 국제정치의 요인들이 부상하고 실증주의 인식론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인식과 문화, 이념의 문제가 대두하면서 기존 이론을 비판하는 다양한 비판이론적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 서구는 물론 동아시아와 같은 다른 지역의 21세기 국제정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류이론과 새로운 이론을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가 공통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구 국제정치이론, 특히 미국의 사회과학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시간적 안목과 서구를 넘어선 다른 지역에 대한 장소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 국제정치가 국가주권과 무정부상태라는 조직원리를 넘어서서 단위의 다차원화와 네트워크적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조직원리를 내포하게 되었다면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했던 과거의 거대 이행의 시점, 유럽 이외 지역이 유럽기원의 근대국제정치로 포섭되는 과정, 그리하여 시공적으로 하나의 근대국제정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이 필요하게 된다. 만약 20세기 중후반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와 미래를 일방적으로 재단하고, 서구의 국제정치경험으로 비서구 지역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소위 역사-장소의 물신화 경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라는 경직된 이론적 틀을 생산하고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 대한 설명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비판적 관점에서 하나의 대안은 역사적 전환과 사회학적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역사사회학적 전환으로 서구의 근대 형성과정, 더 나아가 근대와 탈근대 이행의 결합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책의 2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둘째, 책의 3장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역사사회학적 시각에 따르면 서구의 국제정치적 근대는 매우 긴 중세의 그림자 속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근

대로의 이행과정을 밟았다. 소위 베스트팔렌조약 기점설과는 달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중세, 탈중세 이행, 근대의 시대와 행위자 단위들, 그리고 조직원리가 병존, 결합하여 이행하는 기간을 겪은 것이다. 논쟁의 여지 없이 전형적인 근대가 자리잡은 것은 19세기 초이며, 이후 서구 근대의 지구적 팽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19세기와 20세기 두 세기에 걸친 전형적 근대 속에서도 주권국가를 넘는 정치적 경제적 제국화라는 일탈적 현상이 서구에서 진행되었는데, 소비에트 국제정치관, 나치 독일의 도전,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사실상의 제국 등이 그 예이다. 20세기 후반 탈냉전과 탈근대의 새로운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탈근대의 새로운 단위와 조직원리에 대한 논쟁,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전략들은 여전히 논쟁의 한 가운데 있다. 정부 이외의 다양한 차원의 단위들과 새로운 조직원리들이 출현하고, 이들이 근대의 주권국가 및 무정부상태 조직원리와 병존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근대와 탈근대 이행의 병존과 결합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무정부 상태와 네트워크적 거버넌스가 복합되어 진행되다가 어떠한 새로운 전형적 탈근대로 귀결될지는 미래에 결정될 것이다.

셋째, 서구의 주류 국제정치학 이론을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노력을 동아시아에서 바라볼 때, 이는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압축된 근대화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해주는 한편, 비서구의 국제정치의 특성을 새롭게 조망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기도 한다. 책의 4장은 전체적인 분석틀의 입론을 시도한다. 동아시아는 서구에 비해 더 많은 시대의 국제정치논리, 단위의 복잡성, 다수의 조직원리가 중요한 이론적 요소로 존재한다. 근대 이전, 근대 이행기, 그리고 21세기에 명확해지고 있는 탈근대 이행기 등 각 시대별 차별성과 각 조직원리들을

정의할 필요와 더불어, 서구 국제정치 현실과 이념 및 개념의 전파 과정 또한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5장은 전통시대와 근대 이행기, 6장은 근대와 탈근대 이행기 동아시아 국제정치현상의 이론화 과정을 논한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각 시대와 조직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국제정치학 이론, 그리고 국제정치 이외의 분과들, 즉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연구성과를 일별하고, 각 시대와 조직원리들이 상호 연결되고 복합되어 어떠한 이슈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별한 이후, 이들을 구체적인 현실 이슈와 연결하여 분석에 필요한 개념과 가설 등 이론적 구성요소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다른 국제정치의 조직원리가 한 시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단위가 아직 불완전하게 정립된 가운데 복수의 다층적인 국제정치게임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근대 국가 간 국제정치를 시행하면서도 국가들의 이익과 권력배분, 그리고 규범적 기초에 따라 근대 이전, 근대 이행기, 탈근대 이행기의 조직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게임을 동시에 해나가는 것이다. 어떠한 이슈에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들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들 간의 변천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의 경험적 측면을 밝혀줄 것이다.

다섯째, 복합조직원리론에 기초한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은 한국의 외교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과거로부터 축적된 과제를 완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강압된, 시대에 늦은 국제정치적 근대화를 과제로 안게 된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비전으로 동아시아와 세계의 탈근대화를 맞이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에 맞는 탈근대화 과정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실천적

획이 필수불가결하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에서 동아시아의 시대적 장소적 복잡성은 남북관계, 한미동맹,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 및 지역주의 성립 과정에서 골고루 표출되어 왔다. 이론적 분석과 더불어 미래의 정책은 한국과 동아시아 모두에 중요한 일이다. 7장은 미래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장기적이고 바람직한 외교전략의 방향을 다룬다.

